

2020. 6. 19. (금) 언론보도

KBS

2020년 06월 19일 (금)
사회

이재명 “의정부서 대북전단 발견...책임 물을 것”



이재명 “의정부서 대북전단 발견...책임 물을 것”

'대북전단 살포' 긴장감 고조... '차단막 치는' 접경지역



[앵커]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까지 오늘(19일) 단속에 총력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모래 페트병에 햄살을 담아 보내겠다고 예고했던 탈북민 단체는 일단 반 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단체도 있어서 긴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점검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관련 물품을 실은 차가 없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요주의 차량 정보도 미리 파악해왔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 점검지역 5곳에 경찰 200여 명이 쫓았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점검 지역 전체를 재난안전범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문순/강원지사 :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천봉쇄가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전단을 뿌리는 걸 아예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경기도의 조치와 함께 모든 점검지역이 차단된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북한 인권 활동도 중요한데 선을 넘어서는 이런 활동은 우리 도민 안전 측면에서 허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겠다.]

경기도는 포천 현장을 급습해 전단 살포용 가스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탈북민단체 큰생은 모래로 예정했던 햄살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관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권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한 거지, 우리 민간하곤 관계없지, 우리는 민간 NGO 단체니까.]

지자체에 이어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혜실/통일부 부대변인 : 현장 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법무부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민감품 경찰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엄정 시범 처리를 약속했고, 여당은 이 단체들의 자금 출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北, 군사적 행동 예고 불안 고조 경기 접경마을 ‘차분’ 인천 ‘긴장’

강화주민 “市, 늦은 대책 아쉬워”
파주 접경민 안정적 일상 이어가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군사적 행동을 예고해 남북미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은 18일에도 차분한 일상을 이어갔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야간 남북미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전격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고, 17일 전국 첫 행정명령 집행을 집행한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인 일상이 눈에 띄게 돌아왔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 김모(51)씨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다 그제 폭파 소식에 잠깐 긴장했다”면서 “농번기에 일손까지 놓을 수도 없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민 A씨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놀랐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 조치로 사실상 북에 대한 일부 남측 세력의 도발이 원천봉쇄된 만큼 주민들의 안정화와 함께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라며 “정치권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적거리는데 코로나19 때와 같은 이재명의 전격적화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남북 갈등 상황이면 경기도와 함께 관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정하영 김포시장 및 관계자들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정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심이 집중되는 서해5도 등 인천은 긴장감이 여전했다.

당장 북한이 서해 NLL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경우 일손을 놓고 대피소로 달러가야 하는 서해5도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위협에 초조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7일 오후 우리군의 서북 도서 순환훈련이 진행될 연평도를 비롯해 4월부터 시작된 북어기의 막바지 꽃게철인 지금 어획량이 예년보다 늘어 조업이 한창인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5도는 언제 갑자기 조업이 통제될지 몰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등밭이나 그

물을 건어 올리고 있다.

백령도 어민 김모(62)씨는 “서해5도에서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며 내성이 생겼지만 남북관계 악화 때마다 불안한 건 사실”이라며 “조업이 통제되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고 토로했다.

한 강화도 주민은 “남북 갈등 때마다 불안감이 떨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며 “인천시도 대북전단 금지 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기도처럼 즉각적으로 나서 갈등의 원인을 제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백건기자 90vius@

북한 여행 가이드북 제작 계획 전면 철회 도 "남북관계 악화 따른 수순"

경기도가 남북관계의 등락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 여행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했지만 지난 16일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2천180만 원의 예산을 들여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광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8월 말까지 2천 부의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이었다. 가이드북에는 북한 여행 준비물, 교통편, 숙소, 개성 등 북한 주요 관광지 소개, 관광 시 유의점, 관광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도는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지도 차원에서 개별 관광을 추진, 언제론 남북관계 해빙의 징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북한 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했다.

특히 이재정 지사가 개성관광 재개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도는 북한 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개성관광과 더불어 북한 관광의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도는 북한 관광 가이드북 제작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 개별 관광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 관광 가이드북 또한 제작을 취소하는 게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영 기자 ih@khoilbo.co.kr



18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함해북도 개성군 마을 풍경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iw@khoilbo.co.kr

기호일보

2020년 06월 19일 (금)

사회 18면

대북전단 떨어져 지붕 파손 이재명 지사 “불법행위 엄단”

달북인단체가 지난달 초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 일부가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의정부시 산곡동의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대북전단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닐봉지 안에는 대북전단과 음식물 일부가 담겨 있었다. 낙하물이 떨어진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집주인은 낙하물이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일부 파손된 슬레이트 지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낙하물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낙하물이 지난달 7일 한 달북인단체가 파주에서 날린 대북전단의 일부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당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인천일보

2020년 06월 19일 (금)

종합 02면

도 ‘대북전단’ 금지…날 세운 통합당

하태경 “쇼 연출” 독설·비난
이 지사 즉각 반박 “용납 못해,
살인 부메랑 왜 도민이 감당”

경기도가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전단살포 준비 사용 금지’ 등 행정집행을 발동하자 하태경 미래통합당이 발근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북부 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협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처분’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11월30일

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며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지금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명백한데 북한에는 적소라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쇼 좋아하는 이 지사

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관문집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즉각 반박했다. 이 지사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합니까”라는 글은 통해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며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터

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걸면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날아왔더라면 어땠겠습니까?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반평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인 만큼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의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기 기자 dem08@incheonilbo.com



이재강평화부지사, 대북전단살포 현장점검 행보

18일 오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하영 김포시장 및 관계자들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인천·경기, 통일부 전철 밟지 말아야

관내에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지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완전금지시킨 셈이다. 인천시도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집합금지지역으로 고시하고,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심해도 없이 불필요하게 복합을 자극해 도발의 범미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경기·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바 있다. 단적인 예가 2014년 10월 탈북민단체가 북쪽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 증신을 향해 북한군이 포탄을 발사해 경기 연천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일이다.

북한이 날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데는 북한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부

인할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로 제기됐음에도 통일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을 자초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안일한 상황 판단과 방향 설정에 역할을 해온 사람들은 모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성격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뒷북이나 차다 난감한 처지에 이르니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직접 나선 측면이 있다. 기왕 경기도와 인천시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는 탈북민들이 정상적인 탈북민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체성이 의심받는 집단인데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행정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통일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